저탄소 인증에 AI 기술 더해… 축평원, 미래 축산 경쟁력 강화

해외 저탄소 인증제 비교·분석
그린워싱 방지·온실가스 검증 제안
동물복지 등 기존 인증 연계 제시
26일 AI·데이터 축산 혁신 포럼
품질평가 고도화·맞춤 서비스 공유


세종 아름동 소재 축평원 본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해외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물 품질인증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펴냈다. 국내 인증제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평원은 또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 및 기술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을 이번 주 개최한다.

축평원은 '해외 저탄소 축산 및 축산물 품질 인증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국, 브라질, 호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과 인증제 운영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이 담겼다. 국내 축산물 품질 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표시·광고와 관련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축산물 인증 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광고)이란 친환경적 특성이나 환경 개선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육류의 환경 관련 표시 지침을 개정해 제품에 표시한 친환경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과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소비자가 축산물의 환경적 효과를 오해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축평원은 "동물복지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축산물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육질과 외관뿐 아니라 가축에게 어떤 사료를 먹이고,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도 축산물 품질 인증 기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국가 비육장 인증제(NFAS)를 통해 소 한 마리당 사육 공간과 사료 급여량 등으로 비육장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럽연합(EU)은 산란계의 사육 공간을 1㎡당 9마리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안전관리인증(HACCP) 등 기존 인증 제도와 연계해 농가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해외 저탄소 축산과 축산물 인증 제도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 발전과 유통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시대, 미래 축산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축평원은 오는 26일 세종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에서 '2026 축산데이터 혁신 서비스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 주제는 '데이터의 가치를 넘어, 축산의 미래를 바꾸다'이다. AI·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와 기술혁신 사례 소개 및 축산 현장의 데이터 활용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1부: AI 기술과 신규 서비스로 축산의 미래를 열다'와 '2부: 데이터의 연결, 현장의 변화를 이끌다'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 품질평가 혁신 성과와 축산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인 AI 품질평가 고도화 사례와 농가별 맞춤형 경영관리 서비스 등 축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업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AI 분석 서비스 성과를 공유한다. 또 2026년 축산 피드백 사업의 혁신 성과와 지역별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AI·데이터 기반 피드백 서비스의 활용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축산 데이터의 연계·분석·활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통해 축산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원장은 "이번 포럼은 AI와 데이터 기술이 축산 현장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축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국민 사과

고객 65만명·조달시스템 87만명 피해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민감정보 포함
2차 피해 예방·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한국전력이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임직원·협력사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피해 예방과 보안 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일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 IP 접속 차단과 일부 대외 서비스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뒤, 22일 김동철 사장(사진)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플랫폼 '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조달 업무용 '전자조달시스템(SRM)'이다. 한전ON에서는 전기사용 고객 65만 487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요금·청구정보뿐 아니라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카드사·카드번호·카드명의자 등 금융·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

SRM에서는 총 86만9761명분의 정보가 유출됐다. 기업 대표자 42만6827명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4개 항목)와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 44만2934명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6개 항목)가 포함됐다.

한전은 간편인증 등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해 온 일부 기능이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으나,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강화와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전은 유출 확인 대상자에게 유출 항목과 사칭 전화·문자·이메일 대응 요령 등을 개별 안내했으며,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는 만큼 '한전ON 홈페이지'에서 유출 여부 조회 및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123)와 전자조달시스템 전용 상담 창구로 받는다.

김동철 사장은 사과문에서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마사회, 정부혁신박람회서 말문화 알린다

25~27일 킨텍스서 체험형 전시 운영

한국마사회가 2026 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해 '말문화를 활용한 미래교육 및 기관의 주요 혁신성과'를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달 25~27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 한국마사회는 '말(馬)이 되는 혁신, 말문화와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말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를 구성하고, 기관의 혁신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시부스에서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힐링의 경험을 제공하는 '말랑말랑 마음교실'을 소개하고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시행한다. 또 A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말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대상으로 일상속 말문화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을 알린다.

아울러 마사회가 연간 추진해 온 혁신사례와 국정과제 실적을 전시·홍보하고 국민 참여형 투표도 진행한다. 방문객이 성과를 살펴보고 직접 우수사례 선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마사회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말문화 확산을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향후 혁신과제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日,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해법 모색

노사발전재단, 韓·日 노사정 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의 노동 관련 기관이 만나 양국의 고용노동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사발전재단은 도쿄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일터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9일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경험 및 기업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또 노동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한·일 공동연구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업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노사정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일본의 타카미 토모히로 연구원이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기업의 인사관리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일본의 오학수 특임연구원이 일본 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재단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과도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AI를 활용한 '해외노동정보 AI'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에너지 미래인재 육성 위한 진로교육 확대

에기평, 체험형 에너지 교육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학(원)생 중심의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저변을 초·중·고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넓히기 위해 진로탐색 콘텐츠 개발과 교육기부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23일 에기평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공동으로 체험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출동! e-히어로즈, 기후위기 탈출작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에너지 분야 직업을 찾아보는 워크북과, 기후·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직업의 역할을 익히는 보드게임으로 구성됐다.

에기평은 올해 강남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상·하반기에 걸쳐 지역 내 4개 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문강사와 에기평 사내강사가 함께 참여한 이 교육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약 92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에기평은 지난달(11월)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교육기부 대상을 넓혔다. 참여 학생들은 아동 참여형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도전 레드벨'을 통해 기후행동을 실천해 온 아동·청소년들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대학 탐방형 교육기부에 자체 개발 워크북과 보드게임을 결합했다. /세종=한용수 기자